

4. 50퍼센트 지지율 대통령이 왜 심판받았을까? _수도권 상층적 유권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정한울

중간심판으로 끝난 6·2 지방선거, 50퍼센트 지지율은 허상이었나?

6·2 지방선거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최대 관심은 시종일관 역대 지방선거처럼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인지, 여당의 승리로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장이 될 것인지에 집중되었다. 여당은 50퍼센트에 육박하는 국정지지율과 앞선 정당지지율을 근거로 중간심판의 장이 되어 온 역대 지방선거패턴과 달리 정부와 여당의 승리를 자신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기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중간평가의 패턴이 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중간심판론’의 작동 여부를 6·2 지방선거의 최대 핵심 변수 중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다(이내영·정한울 2010, 6).

선거여론조사 공표제한일인 선거 일주일전에 맞춰 5월 24-26일 실시한 방송 3사의 여론조사 및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충남, 경남 등 경합지역을 제외하면 호남, 대구경북 등 여야의 지역기반은 물론 수도권, 강원 등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조사기관에 따라 서울, 경기의 경우 15-20퍼센트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고, 인천의 8-9퍼센트포인트 내외, 강원의 경우는 10-20

* 이 글은 지방선거 직후 동아시아연구원이 발간한 위경페이퍼시리즈 <EAI 오피니언리뷰> 제2호, “6·2 지방선거 수도권 이변, 숨은표인가? 변한 표인가?” (정한울 2010)을 수정, 보완한 결과물임을 밝혀둔다.

퍼센트포인트 정도 한나라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¹⁾

결과는 여당은 수도권 2곳과 지지기반이 강한 대구, 경북, 부산에서만 승리하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야당에 자리를 내주는 '이변'을 연출하며 막을 내렸다. 개표 결과 애초 박빙으로 예상된 강원, 인천 등에서 야권후보가 낙승하고, 반면 큰 격차가 예상된 서울에서 0.6퍼센트포인트 격차, 경기에서 4.4퍼센트포인트 격차까지 야당후보가 여당후보를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전망과 실제 개표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브래들리효과', '숨은표 10퍼센트론', '미네르바 효과', '침묵의 나선' 등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낯선 가설들을 기정사실화하여 예상밖의 결과들을 설명하고자 했다.²⁾ 이들 새로운 가설들은 기본적으로 야당후보를 선택한 표심의 상당수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거나 이들의 여론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숨은표 가설과 브래들리효과가 그 원인을 조사방법의 한계에서 찾는다면, 미네르바 효과나 침묵의 나선 이론은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한 정치사회적 요인을 주목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해석들은 야권이 선전한 선거결과와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와 여당의 우세를 예측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사이의 차이는 여론조사 방법의 한계로부터 발생했다는 인식에선 공통적이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거나 한나라당 후보들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된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들은 실제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있던 정권 및 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심판론을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한 결과라는 것이다.

1) 이 시기 실시한 조사는 지상파방송 3사, 〈한겨레〉, 〈조선-YTN〉, 〈동아일보〉 등으로 5월 27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다.

2) “죽집게 출구조사 빚나간 여론조사”(〈동아일보〉 2010/06/04), “[분수대] 여론조사의 오류”(〈중앙일보〉 2010/06/03), “여론조사 전문가들 한숨, 왜 빚나갔나”(〈한겨레신문〉 2010/06/03), “유선전화응답방식, 20, 30대 표심 반영 못해”(〈한국일보〉 2010/06/03), “6·2 결과분석 ①승패요인(종합)”(〈연합뉴스〉 2010/06/03), “1주전 여론조사와 탄판 대접전, 왜?”(〈조선일보〉 2010/06/03) 등의 기사를 참조할 것.

이러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위의 가설들은 선거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정권심판론’, ‘한나라당 우세의 선거 전 여론’과 ‘실제 투표에서의 야당 강세 현상’은 공존할 수 없다고 보는 일차원적, 양극적 관점(unidimensional/bipolar framework of attitude formation)에 의한 해석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다차원적이면서 상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즉 업적 평가의 차원에서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견제 혹은 심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위의 가설들은 여론조사 공표금지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약 일주일 간의 시간 동안 실제 여론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여론의 변화가능성을 배제하다보니 선거결과를 잘못 예측한 여론조사 방법론의 한계에만 주목하게 된다. 결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유권자 표심의 변화라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여론조사 방법론 논쟁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³⁾

이 글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한나라당 후보의 초반 우세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야당후보 지지자를 못 찾아내거나 찾을 수 없게 만든 ‘착시 현상’이나 ‘허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50퍼센트 지지율의 대통령과 선거 초중반 한나라당 우세 여론은 인정하되, 정부와 여야에 대한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를 가진 유권자들이 선거 일주일 남기고 급격하게 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쏠린 ‘표심 변화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50퍼센트에 달했던 대통령의 국정운동을 지지하는 친MB성향을 보이면서도 정부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를 동시에 가졌던 유권자들이나, 반대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3) 물론 본 연구 역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조사기관마다 표준화되지 않고, 또 편법이 활용되는 비과학적 샘플링의 방법 등으로 과대대표, 불안정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김춘석·정한울(2010)을 참조할 것. 즉 샘플링 방법의 문제로 인해 특정 집단이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 혹은 과소대표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소수파의 침묵이나 사회적 억압분위기로 인한 미네르바 효과 등 인위적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숨기는 비율은 그다지 큰 변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소위 숨은표 가설이나 브래들리효과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번 선거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상충적 태도가 공존하는 유권자들의 존재와 이들의 투표행태가 이번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간과하게 만들어 정치적 해석의 문제를 방법론 논쟁으로 대체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 등이 대표적으로 상충적 태도를 갖고 있던 유권자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선거마감까지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하다 투표 전 일주일 사이에 야권 후보 지지로 급격히 표심이 이동했고 이것이 극적인 선거결과에 주된 이유였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를 택한 정권심판론자, 정권심판을 바라면서도 야당에 실망한 수도권권의 '상충적 유권자'(ambivalent voter)들이 투표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투표선택을 바꾸었는지 이번 6·2 지방선거 패널조사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왜 대통령 지지율에 주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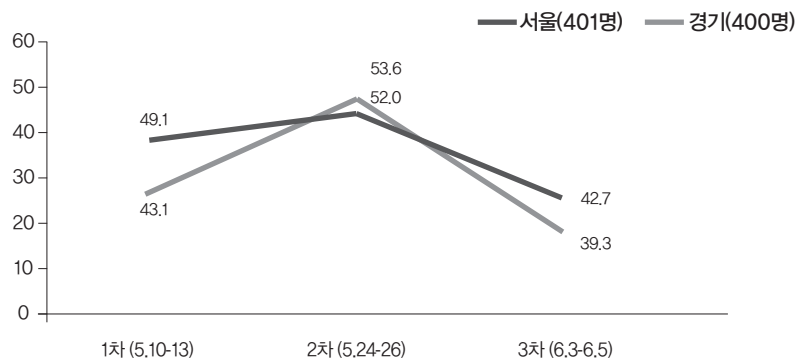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예측의 최대변수로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갖는 중간평가의 성격 때문이다. 1995년 지방선거의 부활이후 임기 중후반에 실시된 1995년, 2002년, 2006년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졌으며, 예외 없이 집권당의 패배로 귀결되었다(강원택 2010; 진영재·조진만 2002; 이내영·정한울 2010b, 6). 이러한 경향은 미국 선거정치이론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다. 중앙정부/집권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수권정당이 다른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를 선호하거나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referendum)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Jonston et al. 2000, 121-122; Norris 1990, 145-9; Tufte 1975). 중간평가론은 결국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상벌(rewards-punishment)의 의미로 지지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정한울 2007). 즉 중간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업무수행에 긍정적이면 여

당후보를 선택하고, 업무수행이 부정적이면 야당후보를 선택한다는 논리다. 현 정부의 업적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국정지지율이라는 점에서 국정지지율이 높을 경우 정부 여당에 유리하고, 낮을 경우 정권심판론이 작동하여 야당후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

MB 지지율 서울 52.0퍼센트, 경기 53.6퍼센트

선거 중반까지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우세를 이어갔던 데에는 무엇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대통령 지지기반이 작동하고 있었다. 임기 중반의 대통령 지지율이 40-50퍼센트를 넘나드는 현상은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사례이다. 이는 여당이 선거 막바지에 선거승리를 낙관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서울에서 1-3차 조사에 모두 응한 401명과 경기 1-3차 조사에 모두 응한 400명 대상으로 선거기간 중 서울과 경기지역 유권자들의 국정지지율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MB 국정지지율 변화 : 서울/경기지역 (단위 : %)



천안함사건과 국정지지율

1차 조사시점에서도 비슷한 시점에 측정한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천안함사건의 여파로 지지율이 두 지역에서 모두 50퍼센트를 넘어섰다. 두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는 1차 조사시점에 49.1퍼센트였고 천안함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결과발표(5월 20일) 직후인 2차 조사시점(24-26일)에는 52.0퍼센트까지 상승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43.1퍼센트로 서울지역에 미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2차 조사에서는 53.6퍼센트로 서울지역 지지율을 넘어섰다.⁴⁾

선거 일주일전 수도권에서 확인된 국정지지율의 상승 현상은 기본적으로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보수층이 대거결집의 결과였다. 다만 중도층의 경우 서울 지역과 경기지역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여준다. 1-2차 조사기간 중 서울에서는 보수층에서 국정지지율이 58.2퍼센트에서 71.0퍼센트로 12.8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진보층에서는 2.4퍼센트포인트(28.0퍼센트→30.4퍼센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7.1퍼센트포인트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 서울에서의 국정지지율은 전적으로 보수층 결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기에서는 보수층 결집(62.8퍼센트→75.5퍼센트) 현상뿐 아니라 중도층(35.7퍼센트→50.1퍼센트)에서도 지지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최소한 경기지역에서는 천안함사건 발표 이후 소위 안보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의 덕을 일부 본 것으로 보인다.

[표 1]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단위 : %)

	서울 (400명)			경기 (392명)		
	진보(101명)	중도(148명)	보수(151명)	진보(89명)	중도(154명)	수(148명)
국정지지율						
1차(5.10-13)	28.0	53.9	58.2	22.5	35.7	62.8
2차(5.24-26)	30.4	46.8	71.0	23.7	50.1	75.5
3차(6.3-6.5)	20.7	39.0	60.5	14.1	34.4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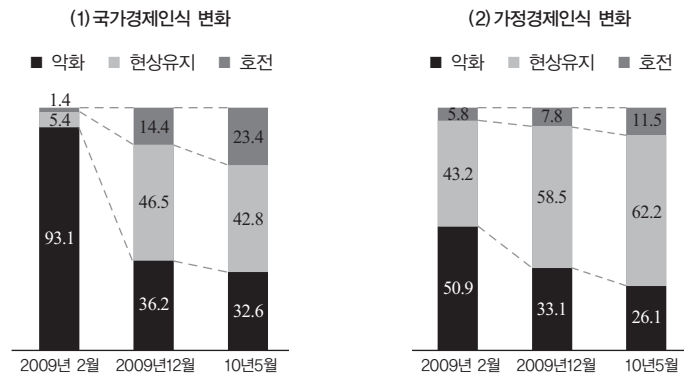
높은 국정지지 요인 : 경제실적

천안합사건이 선거기간 중 50퍼센트를 넘어서는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반에도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비결은 역시 '경제'이다. [그림 3]을 통해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 이후 2010년 선거까지의 경제인식 변화를 살펴보자.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모두 호전되었다는 여론보다는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다수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관적 인식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현상유지 여론이 다수다. 특히 국가경제의 경우 2008년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나빠졌다는 인식이 93.1퍼센트에 달했지만, 2009년 12월, 2010년 5월 조사에서는 각각 36.2퍼센트, 32.6퍼센트로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좋아졌다는 여론도 1.4퍼센트에서 14.4퍼센트, 23.4퍼센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 성적표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국정지지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국가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자(168명) 중에선 76.4퍼센트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상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층(246명)에서도 국정지지율은 56.7퍼센트로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다. 현상유지 층에서도 국정지지율이 높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한파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상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층(298명)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28.4퍼센트에 불과했다. 결국 경제인식이 호전되었거나 최소한 나빠지지 않았다고 보는 현상유지층이 과반수에 달하며 경제불만층의 지지율 하락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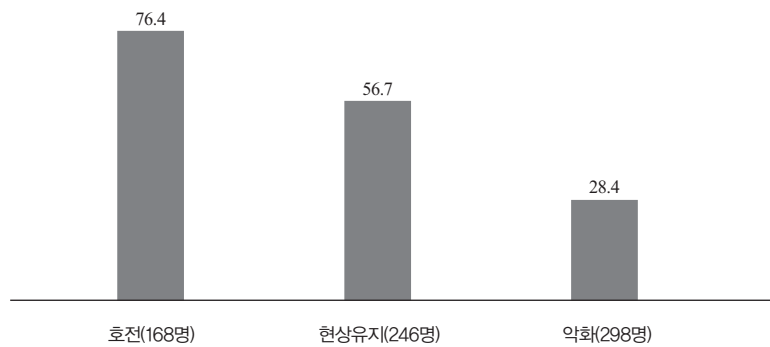
4) 그러나 선거 직후 조사에서는 선거패배의 책임론이 부각되며 서울 42.7%, 경기 39.3%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금융위기 이후 경제인식 변화 (단위 : %)



* 주 : 2009년 2월, 12월 조사는 "EAI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2010년 5월 조사는 "2010 지방선거 1차 전국패널조사"임.

[그림 3] 국가경제 인식별 국정지지율 (단위 : %)



* 주 : 서울과 경기지역의 7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경제 인식은 "전국패널 1차 조사", 국정지지율은 "전국패널 2차 조사" 결과임.

상충적 유권자의 선택

수도권 이변, 숨은표인가? 변한 표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사실이고 중간평가론이 작동했다면 왜 선거결과를 집권당 후보들의 패배로 끝났을까? 하나의 가설이 앞서 정리한대로 여론조사가 야권성향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숨은표가설’이나 ‘브래들리효과 이론’이다. 이 경우 선거 중반까지의 한나라당 후보들의 우세나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야권성향의 응답자들이 대표되지 못한 결과이며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것은 여론조사에 포착되지 않은 야성향의 표심이 실제 투표장에서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조선일보 2010/05/19).⁵⁾

그러나 본 연구는 선거결과와 선거 전 예측의 차이를 ‘숨은표가설’이나 ‘브래들리효과’로만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첫째, 숨은표 혹은 브래들리효과 이론은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나 처벌로 인해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때 오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혹은 사회의 다수 입장과 다른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위축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 지역패널조사(5월 24.26일 실시)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천안함사건 발표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등 자신의 지지후보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사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 응답을 보면 패널조사에서 서울에서는 59.1퍼센트, 경기지역에서는 67.3퍼센트가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천안함사건에 대해서 서울 61.2퍼센트, 경기유권자 67.1퍼센트가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해찬 서울시장 선

5) 이러한 숨은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 했는데,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원 의원은 약“12%포인트 가량을 야당의 숨은표”라고 주장하고, 이상호 민주당 대변인 역시 “재보선 표심을 보면 10-15%포인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숨은표”라고 주장했다.

대위원장을 비롯한 야권지도부도 이 조사를 근거로 서울에서 한명숙 후보의 근소한 승리를 예측한 바 있다(프레시안 2010/05/31).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지적한 유권자들이 정작 지지후보 문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억압효과로 인해 자신의 선호를 숨겼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기존 여론조사 결과나 본 패널조사에서 선거 막바지에 유권자의 표심변화가 포착되었다. 실제로 방송3사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인 투표 2-3일 전인 5월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충남, 경남에서는 안희정, 김두관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리거나 유지했고, 인천, 강원과 충북의 경우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3-5퍼센트포인트 이내로 좁혀지는 등 야권후보의 추격이 급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월 1일 방송 3사는 주요 뉴스를 통해 공표금지조항 때문에 수치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과 강원이 새로운 경합지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충북 역시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⁶⁾

다만 이 조사에서도 서울의 경우 11.2퍼센트포인트, 경기에서는 14.7퍼센트포인트 격차가 유지되었다(〈한국일보〉 2010/06/03). 실제 선거결과가 서울 0.6퍼센트포인트 차, 경기 4.4퍼센트포인트 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0퍼센트포인트 가량의 변화가 선거막바지에 발생한 셈이 된다.

여기에서 서울, 경기에서 왜 선거막판에 표심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편차를 숨은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 변한 표로 볼 것인가? 이것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인 셈이다. 그러나 본 패널조사를 분석해보면 선거 막바지에 적지 않은 표심변화를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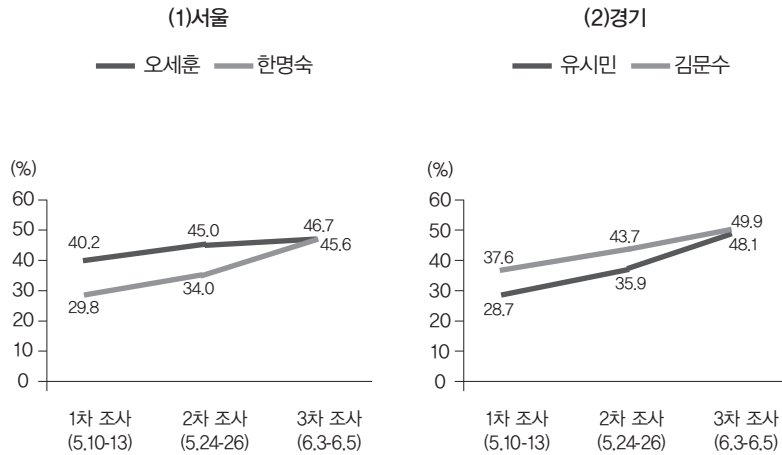
6) 여론조사결과와 공표금지 기간에 실시한 방송3사의 조사결과는 “1주전 여론조사와 판판 대접전 왜” (조선일보) 2010/06/03)와 “한나라 우세 점치다 선거 하루 전 접전 전망” (미디어오늘 2010/06/03)을 참조할 것.

할 수 있다. 매 조사 시점마다 다른 응답자를 모집하여 조사하는 일회성조사는 두 시점의 조사결과가 달라져도 실제 여론이 변화한 것인지 매번 모집한 응답자들의 특성이 달라져서 생긴 변화인지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패널조사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모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태도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서울, 경기지역 패널조사에서 이미 1차 조사(5.10-13)와 2차 조사(5.24-26) 시점 사이의 조사결과를 보면 같은 시점에 실시된 일반(전화)조사에 비해 여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반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여야후보 지지율 격차가 15-20퍼센트포인트 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의 경우 1, 2위 간 지지율 격차가 서울에서 10.6퍼센트포인트, 경기에서 8.9퍼센트포인트였다. 2차 조사에서도 서울에선 11.0퍼센트포인트, 경기에선 7.8퍼센트포인트 격차를 보여 다른 조사에 비해 여야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추격 가능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패널조사의 경우 지지율의 정확한 추정보다는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추정에 강점을 가진 일반전화조사보다 최종 선거 결과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다.⁷⁾ 더구나 선거 일주일 전 실시한 2차 조사와 선거직후(6.3-5) 실시한 3차 조사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에 한명숙 후보와 유시민 후보 지지로 급격하게 돌아선 여론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7) 본 연구팀은 그러한 이유로 패널조사가 정확한 여론추정에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과학적 샘플링 조사방법론에 의거할 경우 정확성에서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방법이 가장 우수하다고 본다. 다만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패널조사를 진행해온 바, 조사결과가 실제 투표결과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첫째, 보통 조사들이 지역, 성, 연령 세 변수를 기준으로 표본가중치를 부여하지만, 본 패널조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직업' 변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역별 직업구성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했다. 둘째, 여러 차례에 걸쳐 패널조사에 응하는 패널들은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정치적 관심과 투표의사가 높아 실제투표자층을 더 적절하게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경험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연구팀의 잠정적인 해석이다.

[그림 4] 6·2 지방선거의 지지후보 및 투표후보 변화 (서울·경기지역, 단위 : %)



대안적 가설 : 상충적 유권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투표 일주일 전까지 MB 국정지지율이 상승하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우세한 상황이 왜 투표 당일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일까?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지율 반전의 주역을 살펴봐야 한다. 이 글은 “친MB=정권안정=한나라당 지지”와 “반MB=정권심판=민주당/야권 단일 후보 지지”라는 이분법적인 대결구도 중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고 내적으로 갈등했던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번 선거 이번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친MB=정권안정=한나라당 지지”와 “반MB=정권심판=민주당/야권 단일후보 지지”라는 일차원적·이분법적 선거분석틀(unidimensional/bipolar framework of attitude formation)이 설명하지 못하는 상

충적 유권자의 막판 투표 쏠림의 결과이다. 상충적 태도이론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일차원적인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다. 특정 정치대상에 대한 '호불호'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제로섬 관계가 아닌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김장수 2005, 156-8; 유성진 2009, 100-6).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일관적인 태도의 유권자들에 비해 후보 선택과정에서 보다 많은 내적인 갈등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주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상충적 유권자는 일종의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로서 때론 무지한 유권자이며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유권자들로서 소극적인 정치참여자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논의에 따르면 상충적 유권자들은 내적인 가치충돌(conflict in mind)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정보수집에 나서며 능동적으로 정치참여의 동기를 갖는 유권자들이다(유성진 2009, 108-109; Basinger and Lavine 2005). 유성진은 뉴스접촉빈도 및 투표 여부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2008년 총선에서 정당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층과는 구별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유성진 2009, 118-122).

상충적 유권자이론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에서 심판받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처럼 정부 여당에 대한 태도를 대통령 국정지지율이라는 일차원적인 변수에 의해 분류할 경우 이번 선거결과는 유권자들의 변덕이나 여론조사 방법의 문제로 치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충적 유권자이론을 적용하여, 첫째, 정부 여당의 업적(performance)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현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 여론의 공존 가능성, 둘째,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와 야당에 대한 비판여론의 공존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주로 경제적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다면 현 정부심판론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에 기반한다.⁸⁾

요는 정부에 대한 각각의 태도에 있어 상충된 입장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선 정부업적에 긍정적이면서도 정부견제심판 논리에 동의하는 응답층(친MB심판론자), 정부업적 평가에 부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야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층(반야당반MB심판론자)을 대표적인 양면적,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정부 여당 대신 야권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충적 유권자는 누구인가?

상충적 유권자의 규모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상충적 유권자들은 누구이고 실제 선거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일까?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와 정권심판론에 대한 태도에서 상충적 태도가 공존하는 유권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794명의 패널을 분석해보면 52.9퍼센트가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반면 47.1퍼센트가 잘못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5.1퍼센트였고, 정권심판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9퍼센트

8) 국정지지도율이 정부의 경제적 업적에 의해 좌우된다는 논의는 Lewis-Beck and Stegmaier(2000, 188-191), Yi(2010)를 참조할 것. 본 연구팀은 선거운동 초기 ‘정부견제론’(balancing)과 ‘정부심판론’(punishment) 개념을 구분하여 심판론은 여권이 정치적 수세를 전제하고, 견제론은 여권의 정치적 우세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이내영 외 2010). 그러나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당은 이러한 구분보다 “중간선거에서의 중간평가를 통해 독주하는 정부에 대해 견제해 달라.”고 통합된 논리를 내세웠고, 국민들 역시 두 개념을 구분 없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면사정상 신지는 않지만 본 패널조사의 “안정론과 견제론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 하는가?”라는 견제론 문항과 심판론 문항의 응답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림 5] MB 지지 및 정권심판론 공감도에 따른 유권자 유형 분포

		MB정권심판론에 대한 태도	
		정권안정론 277명(34.9%) MB정권심판 비공감	정권심판론 517명(65.1%) MB정권심판 공감
MB 국정 지지	親MB 국정지지 420명 (52.9%)	親MB안정론 (250명) 親MB의 59.5% 정권안정론의 90.3% 전체유권자의 31.5% 한나라 핵심지지층 (한나라당 지지) 200명 친MB안정론의 80.0% 전체유권자의 25.2% 反한나라당 성향 (무당파/야당지지) 50명 친MB안정론의 20% 전체유권자의 6.3%	親MB심판론 (170명) 親MB의 40.5% 정권심판론의 32.9% 전체유권자의 21.4%
	反MB 국정반대 374명 (47.1%)	反MB안정론 (27명) 反MB의 7.2% 정권안정론의 9.7% 전체유권자의 3.4%	反MB심판론 (347명) 反MB의 92.8% 정권심판론의 67.1% 전체유권자의 43.7% 야당 지지층 (민주/민노/창조/참여) 208명 反MB심판론의 59.9% 전체유권자의 26.2% 反야당성향 (무당파/보수정당) 139명 反MB심판론의 40.1% 전체유권자의 17.5%

* 자료 : 1-3차 조사에 참여한 서울과 경기지역 794명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데이터.⁹⁾

로 나타나 정권심판론의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조사결과를 교차해보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대통령 국정 지지층이면서 정권심판론에 반대하는 ‘친MB정권안정론자’, 대통령 국정 지지층이지만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친MB심판론자’, 대통령 국정에 비판적이면서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반MB심판론자’, 대통령에 비판적이면서 정권심판에도 반대하는 ‘반MB정권

9) 위의 [그림 5]에서 음영처리한 셀들이 양면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 유형으로 분류된다.

안정론자' 이 그것이다. 수도권에서 3차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전체 패널 응답자 794명을 기준으로 보면 MB 국정평가와 정권심판론에 대해 일관된 양 극단을 대표하는 것이 '친MB안정론자(250명)'와 '반MB심판론자(347명)'로서 각각 전체유권자의 31.5퍼센트, 43.7퍼센트다.

반면 양면적 태도로 분류되는 나머지 두 유형 중 대통령 국정운영에 비판적이면서 정권심판론에도 비판적인 '반MB안정론자'는 2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4퍼센트에 불과했고,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보내는 소위 '친MB심판론자'는 170명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21.4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수도권 유권자의 5명 중 1명은 MB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선거에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친MB안정론자'와 '반MB심판론자'의 격차가 12.2퍼센트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심판 대 안정 중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판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또한 반MB심판론, 친MB안정론 등 일관된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 중에서도 정당지지 태도에 따라 양면성을 가진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반MB심판론자 중에서는 상당수가 MB에 비판적이면서도 현존하는 야당세력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탈하여 한 때 한나라당과 대등했던 현재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의 지지율은 여당에 뒤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응답층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는 과반에 못 미치곤 했다. 이는 반MB성향의 국민들 중 현존하는 야당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대통령과 야당에 대한 상충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규모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인 반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MB심판론'자 374명 중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와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지지자를 구분하여 보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반한나라당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374명 중 208명(59.9퍼센트) 수준이었고 나머지 139명(40.1퍼센트)은 여도 야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거나 다른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전체 유권자(794명)를 기준으로 17.5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로서 친MB심판론자 21.4퍼센트까지 합치면 선거막판 변수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반면 친MB안정론자 중에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친MB안정론자 250명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들 중 80.0퍼센트인 200명이 한나라당 지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층은 친MB안정론자의 20.0퍼센트, 전체 응답자의 6.3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상충적 유권자는 누구인가?

상충적 유권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세대, 학력, 이념성향, 정당 지지 등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표 2]에서 기존의 일관된 태도를 가진 유권자 유형(친MB안정론, 반MB심판론)의 경우 세대별, 학력별, 이념별, 지지정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당의 지지기반인 고연령층, 저학력층, 보수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친MB안정론의 비중이 높았고, 야당의 지지기반인 젊은층, 고학력층,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MB심판론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충적 태도를 대표하는 친MB심판론자들의 뚜렷한 사회정치적 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학력에서는 저학력 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

나지만 고졸, 대졸이상 층에서도 적은 규모는 아니었다. 정당지지에서도 한나라당과 무당파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10퍼센트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비교적 반MB심판론에 집중되어 상층적 유권자의 비중이 적었고, 중도 및 보수층으로 갈수록 친MB심판론의 태도가 많았다. 본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반MB심판론자 중 반야당성향의 상층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층은 주로 야당 지지성향의 젊은층, 고학력층, 진보층에서 확인된다.

즉, 친MB심판론의 경우 주로 보수성향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반야당 반MB심판론자들은 주로 고학력층, 진보성향등 야당지지 계층에서 발견된다. 이는 상층적 유권자들이 단순히 저학력, 무당파 층에서 나타

[표 2] 유권자 유형별 사회경제적 배경 (단위 : %)

분류	하위집단	일차원적/일방적		이차원적/상층적		계
		친MB안정론	반MB심판론	친MB심판론	반MB안정론	
연령	20대	17.9	67.9	9.9	4.3	100
	30대	14.7	54.7	26.3	4.2	100
	40대	31.4	44.9	18.9	4.9	100
	50대	50.8	21.9	25.8	1.6	100
	60대+	54.3	16.3	28.7	0.8	100
학력	중졸이하	40.4	31.6	28.1		100
	고졸	40.0	35.4	21.2	3.4	100
	대졸이상	23.6	52.1	20.7	3.6	100
이념성향	진보	13.2	70.4	13.8	2.6	100
	중도	29.0	46.5	19.9	4.7	100
	보수	45.5	23.9	27.9	2.7	100
정당지지	한나라당	64.7	8.7	25.6	1.0	100
	민주당	5.7	75.1	15.3	3.8	100
	무당파	16.3	49.0	25.5	9.2	100

* 주 : 1-3차 조사에 참여한 서울 및 경기지역 794명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데이터.

나는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무지의 산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MB심판론자는 주로 보수층 중에서 여당 지지를 철회한 세력을, 반야당 반MB심판론자는 주로 진보층 중에서 야당에서 이탈한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층적 유권자의 투표선택

투표선택 : 상층적 유권자, 선거 막바지 야권후보 지지 급증

친MB심판론자의 선택

[표 3]과 [표 4]에서 투표 일주일 앞둔 시점의 제2차 패널조사결과를 보면, 친MB안정론자들은 오세훈 후보(83.6퍼센트)와 김문수 후보 지지결집도(81.0퍼센트)가 높았고, 반대로 반MB심판론자들의 경우 한명숙 후보(64.2퍼센트)나 유시민 후보 지지결집도(66.7퍼센트)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구나 이 시기에 상층적 태도를 가진 친MB심판론자 중에선 오세훈(46.6퍼센트), 김문수 후보(60.6퍼센트) 지지로 쏠려 있었다. 반면 한명숙 후보 지지는 19.2퍼센트, 유시민 후보 지지는 18.2퍼센트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반MB심판론의 여론이 친MB안정론보다 많았지만, 후보 지지율에서는 친MB안정론자들과 친MB심판론자들을 여당지지로 끌어들이므로써 지지율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앞서나가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 이 지나 후 선거직후 조사한 3차 패널조사에서는 친MB심판론자와 반MB심판론자 중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확인된다. 서울의 경우 친MB심판론자 중 한명숙 지지가 19.2퍼센트에서 39.4퍼센트까지 상승했다. 반면 이들

집단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는 47.9퍼센트로 2차 조사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3차 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한명숙 후보 지지율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2차 조사 시점에 비해서는 지지 격차가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한명숙 후보는 반MB심판론자들 사이에서 2차 조사에 비해 7.4퍼센트포인트 상승한 71.6퍼센트 지지율을 기록하여 이들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격차를 크게 벌렸다.

경기지역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된다. 친MB안정론자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차 조사에서 81.0퍼센트, 3차 조사에서 82.1퍼센트의 높은 지지를 유지했다. 반면, 반MB심판론자 중에서는 2차 조사까지만 해도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66.7퍼센트에 그쳤다. 그러나 3차 조사시점에서는 유시민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81.8퍼센트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MB 심판론자 중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던 반면 유시민 후보 지지율은 18.2퍼센트에서 28.6퍼센트로 10퍼센트포인트 가량 상승하여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였다.

결국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선거 막바지에 친MB심판론자 사이에서 한명숙, 유시민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반MB심판론자들의 지지결집이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3] 서울 유권자 유형별 지지후보 변화 (단위 : %)

조사 시기 (총 396명)	선거 전 제2차 조사(5.24-26)				선거 직후 제3차 조사(6.3-5)			
	오세훈	한명숙	미결정	기타	오세훈	한명숙	기권	기타
친MB안정론(135명)	83.6	1.5	13.4	1.5	79.3	5.2	11.1	4.4
반MB심판론(176명)	13.1	64.2	13.6	9.1	9.1	71.6	10.2	9.1
친MB심판론(71명)	46.6	19.2	26.0	8.2	47.9	39.4	9.9	2.8
반MB안정론(14명)	13.3	46.7	33.3	6.7	28.6	42.9	14.3	14.3

[표 4] 경기 유권자 유형별 지지후보 변화 (단위 : %)

조사 시기 (총 397명)	선거전 제2차 조사(5.24-26)				선거직후 제3차 조사(6.3-5)			
	김문수	유시민	미결정	기타	김문수	유시민	기권	기타
친MB안정론(117명)	81.0	6.9	10.3	1.7	82.1	8.5	8.5	0.9
반MB심판론(170명)	9.4	66.7	18.1	5.8	7.1	81.8	7.6	3.5
친MB심판론(98명)	60.6	18.2	14.1	7.1	60.2	28.6	10.2	1.0
반MB안정론(12명)	33.3	41.7	25.0	0.0	41.7	33.3	25.0	0.0

반야성향 반MB심판론자의 전략적 선택

반대로 반MB심판론자 중에서 상층적 유권자들의 투표선택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야당 당파성을 가지고 있던 반MB심판론자와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반MB심판론자의 지지변동을 비교해보았다. 가정대로 후자의 그룹이 반야성향과 반MB심판의 경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층적 유권자들이고 이들이 막판 야당후보 지지결집의 주역이라면, 이 집단에서 선거 전후로 한명숙, 유시민 야당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반MB심판론자 346명을 뽑은 후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야당을 지지하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2차, 3차 조사에서의 지지 후보 변화를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반MB심판론자 중 반한나라당 성향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는 오세훈, 김문수 등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2차 조사에서 4.5퍼센트, 3차 조사에서 4.8퍼센트로 변화가 없었고, 한명숙,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 역시 2차 조사에서 78.6퍼센트, 3차 조사에서 85.6퍼센트로 7.0퍼센트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반야당성향의 반MB심판론자들의 경우 2차 조사시점만 하더라도 오세훈, 김문수 후보 지지가 21.3퍼센트, 한명숙, 유시민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45.5퍼센트로 과반수에 못 미쳤다. 반MB정권심판이라는 반정부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존 야당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일주일 후, 선거직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세훈, 김문수 후보 지지는 13.0퍼센트로 8.3퍼센트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명숙, 유시민등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62.3퍼센트로 16.8퍼센트포인트나 증가했다. 선거전후 야당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주로 반MB심판론자 중에서 반야당 성향의 상층적 유권자들이 최종투표에서 야당후보에 전략적으로 투표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5] 수도권(서울/경기) 반MB심판론자 중 야당에 대한 태도별 지지후보 변화 (단위 : %)

서울/경기 (총 346명)	선거 전 제2차 조사(5.24-26)				선거 직후 제3차 조사(6.3-5)			
	오세훈 김문수	한명숙 유시민	미결정	기타	오세훈 김문수	한명숙 유시민	기권	기타
야당지지층(208명)	4.5	78.6	10.1	6.8	4.8	85.6	4.6	50.0
反야당성향(138명)	21.3	45.5	24.1	9.0	13.0	62.3	16.0	8.7

투표결정 시기 : 상층적 유권자일수록 투표일 임박하여 지지후보 결정

서울과 경기지역에서의 이번이 숨은표가 아니라 투표결정을 주저하던 상층적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 막바지에 야당후보 지지로 쏠린 결과라고 한다면 이들의 지지후보 결정시점은 바로 선거 직전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응답자 유형별 투표결정 시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정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

[표 6]에서 친MB안정론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투표 한 달 이전에 지지할 후보를 정한 비율이 48.2퍼센트였고 투표 2주 전에 실시한 후보자등록 시기에 정했다는 응답도 22.8퍼센트였다. 무려 71.1퍼센트는 투표 2주전에 이미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고 있었다. 상층적 성향의 친MB심판론자의 경우 투표 일주일 전 결정했다는 응답이 18.4퍼센트, 2-3일 전 결정했다는 응답이 23.7퍼센트,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0.3퍼센트로 역시 과반수가 투표 1주일을 앞두고 지

지후보를 결정했다. 반MB심판론자의 경우 선거 일주일 이내에 지지후보를 정한 경우가 많았다. 1주일 전 결정했다는 응답이 24.8퍼센트, 2-3일전에 결정했다는 응답도 22.0퍼센트, 투표당일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도 6.3퍼센트, 절반이 넘는 52.1퍼센트가 선거 일주일 이내에서야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특히 반MB심판론자 중에서도 지지하는 야당이 없는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투표 일주일 전 지지후보를 결정한 비율이 23.2퍼센트, 2-3일 전이 27.7퍼센트였고, 투표 당일에 결정했다는 응답도 12.9퍼센트로 64퍼센트 가량이 투표 일주일을 앞두고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결국 이들의 투표성향이 숨어 있었다기보다는 선거 일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야당후보 지지로 활성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6] 유권자 유형별 투표후보 결정시기 (단위 : %)

최종 투표자 (714명)	선거 직후 제3차 조사(6.3-5)				
	투표당일	2-3일 전	투표 1주일 전	후보자 등록 직후	투표 한 달 전
친MB안정론(225명)	3.5	11.6	13.8	22.8	48.2
반MB심판론(315명)	6.3	22.0	24.8	18.6	27.6
친MB심판론(153명)	10.3	23.7	18.4	19.7	28.0
반MB안정론(21명)	15.3	21.1	21.3	7.1	35.2

[표 7] 반MB심판론자 중 야당지지 여부에 따른 투표 결정시기 (단위 : %)

최종 투표자 (714명)	선거 직후 제3차 조사(6.3-5)				
	투표당일	2-3일 전	투표 1주일 전	후보자 등록 직후	투표 한 달 전
야당지지층(199명)	2.4	18.7	25.8	23.6	28.5
反야당성향(116명)	12.9	27.7	23.2	10.2	26.0

야권지지로 급선회한 요인 : 여권공세에 대한 견제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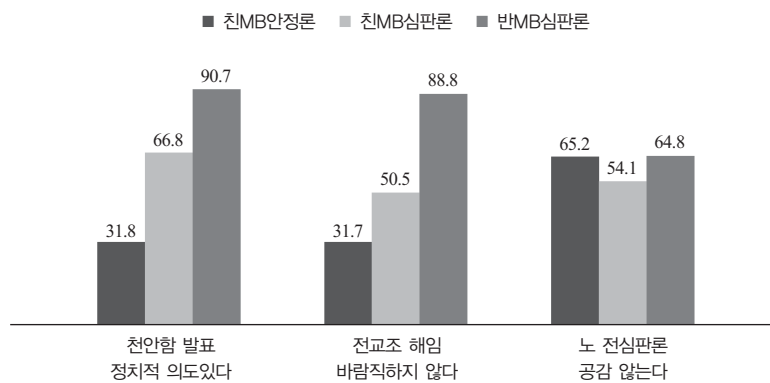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상충적 유권자들은 선거 막바지에 야권후보에 대한 지지로 급선

회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후보경선이 완료된 투표 2주 전부터 투표 직전까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의 변화에 대한 여론의 역풍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거 초중반까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은 쉽지 않은 싸움임을 강조하며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몸 낮추기 전략이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친노성향의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된 이후 청와대 자체 조사결과 50퍼센트 지지를 돌파 소식에 고무되면서 여권의 선거전략이 대단히 공세적으로 전환된다.

MB정부 심판론에 맞선 ‘전 정부 심판론’, ‘전교조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심판론’의 부각, 정부의 선거 직전 ‘천안함 발표’를 계기로 한 북풍, 즉 안보이슈의 전면부각이 그것이다. 실제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이 세 가지 핵심전략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적, 상충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당에 반발하게 만든 3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균형잡기 투표(Balancing Vote)를 강화시킨 셈이다.

이 세 가지 한나라당 공세전략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한나라당 핵심 지지층인 친MB안정론자를 제외하면 큰 반감을 샀다. 천안함사건 발표에 정부

[그림 5] 한나라당 선거 후반기 3대 선거캠페인에 대한 유권자 평가 (단위 : %)



* 자료 : 서울, 경기지역 제2차 패널조사 결과.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MB심판론자는 무려 90.7퍼센트가 그렇다고 보았고, 친MB심판론자들의 66.8퍼센트가 동의했다. 친MB안정론자에서만 31.8퍼센트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선거직전 불거진 민노총가입 전교조교사 해임에 대해서도 반MB심판론자의 88.8퍼센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고, 친MB심판론자들도 과반수인 50.5퍼센트가 공감하지 않았다. 친MB안정론자들 중에서만 전교조교사 해임에 반발하는 여론이 31.7퍼센트로 낮았다. 한편 친노심판론, 전정권심판론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 특히 친MB안정론층에서조차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았다. 무려 65.2퍼센트가 이에 부정적이었다. 결국 선거 중후반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세전략이 반MB심판론자들의 경우 야당지지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친MB심판론자와 같은 상충적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반감과 견제심리를 자극하여 막판 야당지지로 선회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막판 쏠림의 원인과 유권자의 메시지

본 연구는 50퍼센트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왜 선거에서 심판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상충적 유권자이론에 입각해 나름의 답변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이번의 핵심 원인으로 여론조사가 사회적 억압요인에 의해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숨은표’나 숨겨진 여론을 포착하지 못한 여론조사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기 보다는 50퍼센트의 지지율이 선거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정치적 이유를 강조하고자 했다. 즉 상충적 유권자들이 여권의 공세전략에 반발하여 선거막바지에 급격히 야권후보에 대한 지지로 선회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사건의 과도한 활용, 노 전대통령 추모분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참여정부심판론’, ‘전교조심판론’ 등 압박전략이 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숨은표효과에 집착할 경우 논의의 초점이 조사방법론의 문제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과도하게 집중된다. 이러한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과 그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다. 즉, 아무리 50퍼센트를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과 여당이라 할 지라도 일방적 독주, 독선 정치에서 벗어나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야당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온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야권단일 후보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즉 여당 패배이지 야당의 승리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정부와 여당은 비교적 이러한 메시지를 정확히 읽은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가 끝나고 연이어 치러지는 7·28 재보궐선거에서 반성과 자중의 메시지로 선거전략을 구사했고, 8·15 정국구상을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및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새로운 국정전략을 내세워 정국주도권을 찾으려 하였다. 물론 40대 김태호 총리 기용 등 인사정책에서의 문제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여론에 역행하기보다 순행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였다.

반면, 야권의 경우 이러한 메시지를 읽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 이후 두달도 안되어 치러진 7·28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고 만다. 상층적 유권자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독주에 견제에 나섰지만, 7·28 재보선에선 자기 개혁과 변신에 게으른 야권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야권은 6·2 지방선거 결과의 긍정적 요인만 과대해석하고 야권이 가지고 있는 불안요인과 약점을 바로잡는데 게을렀다. 그 결과 각종 공천잡음이 나타났고, MB심판론을 강조하는 것 이외의 이렇다 할 선거캠페인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와 연이은 7·28 재보선에서의 야당의 참패는 한국정치가 얼마나 역동적일 수 있는지 보여

준 결과이다. 이러한 역동적 변화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충적 유권자들의 여론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강조하는 정치적 함의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10.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대리전? : 1998년 지방선거.” 《한국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파주 : 나남출판사.
- _____. 2010. “2002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 : 중간평가 혹은 대선 전초전?”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파주 : 나남출판사.
- 김장수. 2005. “비대칭적 활성화와 정당에 대한 상충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39, 2: 145-169.
- 유성진. 2009.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 : 민주주의의 적인가, 이상적 유권자인가?” 《변화하는 한국유권자3》. 김민진 · 이내영 공편.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이내영 · 정한울. 2010. “2010 지방선거 주요 아젠다와 국민여론.” 〈EAI 여론브리핑〉 74.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이내영 외. 2010. “2010 지방선거의 전국판세와 특징 : 지방선거, 중간심판론 바람 불까?” 〈EAI 여론브리핑〉 79.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정한울. 2007. “한국에서 경제투표는 가능한가?”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이내영 · 이현우 · 김장수 공편.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진영재 · 조진만. 2002.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의 제시와 사례분석 :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 2: 75-100.
- Alvarez, R. Michael and John Brehm. 2002. *Hard Choices, Easy Answers: Values, Information, and American Public Opin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Basinger, Scott J. and Howard Lavine. 2005. “Ambivalence, Information, and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 2: 169-189.
- Johnston. Ron, Charles Pattie, Daniel Dorling, Iain MacAllister, Helena Tunstall and David Rossiter. 2000. “Local Context, Retrospective Economic Evaluations, and Voting: The 1997 General Election in England and Wales.” *Political Behavior* 22, 2: 121-141.
- Yi, Konsu. 2010. “Economy President? Exploring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Approval of Myung-bak Le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2, 2: 331-348
-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183-219.
- Tufte, Edward. 1975. “Determinants of Outcomes of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812-26.

Norris, Pippa. 1999. *British By-elections: The Volatile Elector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동아일보〉. 2010. “죽집계 출구조사 빗나간 여론조사” 6월 4일.
〈연합뉴스〉. 2010. “6·2 결과분석 ① 승패요인(종합)” 6월 3일.
〈조선일보〉. 2010. “1주전 여론조사와 탄관 대접전. 왜?” 6월 3일.
〈조선일보〉. 2010. “野 숨은표 10-15% 예상.” 5월 19일.
〈중앙일보〉. 2010. “[분수대] 여론조사의 오류” 6월 4일.
〈프레시안〉. 2010. “이해찬, 한명숙 근소하게 이길 것.” 5월 31일.
〈한국일보〉. 2010. “유선전화응답방식, 20, 30대 표심 반영 못해.” 6월 3일.
〈한겨레신문〉. 2010. “여론조사 전문가들 한숨, 왜 빗나갔나” 6월 3일.
〈미디어오늘〉. 2010. “한나라 우세 점치다 선거 하루전 접전 전망” 6월 3일.